

딤편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은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딤편이크 성범죄'에 맞서기 위해 <딤편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을 발족하고 활동한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간 공동행동은 딤편이크 성범죄 관련 사안에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으로 우리 사회에 여성을 능욕하는 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여성들의 분노를 모으는 자리를 만드는 등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딤편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은 지금까지 투쟁의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집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단체, 개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0/5 (토) 오전 10시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

- ✓ 딤편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8-9월 투쟁 경과보고
- ✓ [기조발제] 한국사회에서 딤편이크 성범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_ 서울여성회 박지아 성평등교육센터장
- ✓ [발제] 딤편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 발족의 의미와 활동 내용 보고
_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강나연 운영위원
- ✓ [토론] 그럼에도 우리는 성평등교육을 이야기합니다
_ 남다른성교육연구소 김근우 대표강사
- ✓ [토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변화 _ 정치하는엄마들 백윤희 활동가
- ✓ 라운드테이블 토론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8-9월 투쟁 경과보고

..... 윤미영 · 서울여성회 사무처장

[기조발제] 한국사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너희는 '우리를' 능욕할 수 없다.

..... 박지아 ·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

[발제] 딥페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 발족의 의미와 활동 보고

..... 강나연 · 서페대연 운영위원

[토론] 그럼에도 우리는 성평등교육을 이야기합니다.

..... 김근우 · 남다른성교육연구소 대표강사

[토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변화

..... 백운희 ·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플로어 토론

딤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8-9월 투쟁 경과보고

윤미영 · 서울여성회 사무처장

**[기조발제] 한국사회에서 딤편이크 성범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너희는 '우리를' 능욕할 수 없다.**

박지아 · 서울여성회 성평등교육센터장

딤편이크 성범죄를 제작하는 텔레그램 소통방에 22만 명의 참여자가 있다는 뉴스가 한국사회에 등장한 것이 8월 22일, 8월 29일 <딤편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의 긴급기자회견과 매주 금요일 강남역에서 분노의 불길 말하기 대회가 개최된 지 40여 일이 지났다.

한국사회에는 딤편이크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과 분노, 심각한 우려가 퍼졌고, 한편으로는 엄청 대처를 주문 했지만 자신의 잘못은 아니라는 정부, 과장되었다고 주장부터 딤편이크 대처를 위한 법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는 정치권까지 다양한 반응과 대응이 나오기도 했다.

딤편이크 성범죄에 대한 분노를 변화로 이어가기 위해, 한국사회에서 딤편이크 성범죄의 문제와 의미를 돌아보고자 한다.

1. 딤편이크 성범죄, 오래된 그러나 새로운 폭력

딤편이크 성범죄 문제가 수면 위로 또 오르면서 생긴 이견 중 하나는 '이것이 새로운 문제인가, 오래된 문제인가'였다.

딤편이크 성폭력이 드러난지가 오래됐으며 계속 문제가 되었던 디지털 성폭력의 한 종류라는 측면에서 오래된 문제라는 것이 강조되기도 하고, 딤편이크 성범죄가 이전과 다른 점이 강조되기도 한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가능하지도 옳지도 않을 수 있다.

딤편이크 성범죄를 어떤 문제로 규정할 것인가, 이후에 어떤 대안과 해결책을 만들 것인지, 우리는 이후에 어떤 대응을 만들어갈지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이번에 드러난 딤편이크 성범죄가 이전의 폭력들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정리하려고 한다.

소라넷에서 해와역 시위와 n번방 그리고 딤편이크 성범죄까지, 디지털 성폭력의 진화

호주의 학자인 니콜라 헨리 & 아나스타샤 파월은 2015년 논문에서 모바일과 인터넷 기술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성적으로 협박, 통제, 강요, 모욕, 대상화,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기술매개 성폭력(Technology-facilitated sexual violence, TFSV)으로 정의했다.¹⁾

1) 헨리, N & 파월, A (2014). "The Dark Side of the Virtual World: Towards a Digital Sexual Ethics", in Henry, N. and A. Powell(eds.), Preventing Sexual Violence: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to Overcoming a Rape Culture, New York: Springer, pp.84-104.

딤편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이에 대해 한국사회에서는 ‘온라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의 용어로 사용해왔고, 불법 촬영 및 불법유포 이슈가 불거지기 시작한 2010년대 중후반부터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의 표현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²⁾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 폭력을 폭넓게 지칭하며, 그중에서도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 불법합성 등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성범죄로 포괄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속된 법률 제·개정을 통해 점차 사각지대를 줄여가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도 주되게는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한국사회에 등장한 디지털 성폭력의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소라넷 폐지 운동’ ‘불법촬영과 해화역 시위’ ‘n번방’ 사건 등이 있다.

소라넷은 해외에 서버를 둔 한국어 성인 사이트로, 소라넷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수사는 2천년대 초반부터 진행되었으나, 사이트 폐쇄와 개설을 반복하며 지속 되었다.

2011년 9월 동아일보에서 ‘소라넷에 자신의 모습이 몰래 사진으로 찍혀 올라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여고생의 사연’을 보도하며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2015년 8월 소라넷을 통해 약 9분 40초 분량의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몰카 동영상’ 2개가 유포되어 공분을 샀으며, 11월 5일, ‘소라넷 골뱅이’라는 고발 글, ‘초대남 모집 글’로 그 심각성이 더욱 크게 알려졌다. 2015년 12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위험한 초대남-소라넷은 어떻게 괴물이 되었나’라는 제목의 방송이 되기도 했다.

이에 여성들은 소라넷 고발 프로젝트와 집단서명으로 폐쇄 운동을 진행했다. 소라넷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고발, 우회접속 경로를 알리는 트위터를 팔로잉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라넷 하니?’라고 트윗을 보내는 계정을 운영하였다. 이후 경찰은 네덜란드와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현지에 있던 소라넷 핵심 서버를 폐쇄하고 사이트 광고주와 카페운영진, 회원 등 62명을 불구속 입건하며, 국내 최대 음란사이트 ‘소라넷’ 서버를 폐쇄하는 데 성공했다.

2018년 5월 19일 시작된 해화역 시위는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불법촬영의 확산과 이에 대한 경찰의 편파수사가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불법촬영 사건들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던 경찰이 여성이 피의자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빠른 수사와 검거, 포토라인에 세우는 등 편파적인 대처를 한 것이 해화역 시위의 직접적인 계기였지만, 이 역시 그동안 심각하고 만연한 불법촬영과 이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분노였다는 점에서, 해화역 시위의 결정적인 분노의 계기는 ‘여성에 대한 불법촬영’ 문제로 볼 수 있다.

소라넷 문제로 드러난 온라인 공간의 성폭력 중 대표적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불법촬영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화장실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로, 여성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 공간에서 피해자가 되고, 친밀한 관계가 원치 않는 영상유포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알려지게 되었다. 여기에 이를 판매함으로써 돈을 버는 사이트와 집단이 존재한다는 ‘웹하드 카르텔’까지 드러났다.

2) 기술매개 성폭력의 ‘실질적’ 피해와 그 의미, 김애라(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3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그러나 2017년에는 이러한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피해지원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촬영물을 스스로 찾아다니며 직접 삭제하거나 사설 업체에 거액의 돈을 주고 의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와중에 벌어진 편사수사 사건은 여성들의 분노에 불을 당겼으며, 주최측 추산 최대인원 11만명이 모인 거대한 시위가 7차까지 이어졌다. 혜화역 시위는 불법촬영 등이 범죄로 규정되고 삭제지원 등의 피해자 지원제도 마련 등 법 개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N번방 사건은 2018년 12월에 드러난 사건으로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의 성착취물이 유통되었던 사건이었다.

2019년 1월 8일 서울신문의 탐사기획 '나는 너의 아동이 아니다' 기사에서 텔레그램 대화방 10여 곳에 잠입 취재해 사건의 심각성이 알려졌다. 이후 잠입취재 및 수사과정에서 유료입장을 하는 성착취방이 여러 개 존재하며 이곳에서 극단적인 성착취가 일어났음이 확인되었다. 한때 보고를 통해서 이런 성착취 소통방에 참여 인원이 26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N번방 사건을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500만 명이 참여할 정도로 국민적인 공분이 일었으며, 성착취물 등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긴 N번방 방지법이라는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기존의 전통적 의미와 성폭력과 다른 '기술매개'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폭력이라는 것이다. 각 사건은 기술매개 온라인 성폭력이 이전의 성폭력과 다른 특성을 지닌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라넷 사건에서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무차별적이고 대량으로 사진 및 촬영물이 게시되고 확산 될 수 있다는 심각성, 온라인의 공간이 범죄의 모의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히 그저 거리에 있는 사진이 찍혔을 뿐이지만 극단적 성적대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혜화역 시위를 촉발한 불법촬영의 확산 문제에서는 상대의 동의 없는 촬영 또는 유포라는 방식의 등장으로, 일상 공간에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남성과의 친밀한 행위 자체가 폭력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

N번방 사건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대규모로 모의 되거나 일어나고 있으며, 성폭력이 여성을 '노예화'하는 굴욕과 모욕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는 그동안 이어져 온 디지털 성폭력 사건들의 특징이 고스란히 담겨있으며, 한편으로는 문제점들이 극단적으로 강화되었다.

2. 딥페이크 성범죄,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그렇다면 이번에 문제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전의 성폭력과 비교하여 변하지 않은 것과 변한 것은 무엇일까.

1) 변하지 않는 성폭력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딥페이크 성범죄가 이전의 성폭력과의 공통점의 첫째는 말 그대로 성폭력이라는 점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술의 발전이 직접적으로 성폭력, 여성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라는 것이다.

성에 대한 폭력이 가능하고 타인에 대한 성적인 폭력이 누군가에게는 욕망 또는 즐거움이 될 수 있는 사회가 존재하는 한, 기술의 발전은 계속 변화되고 진화된 성폭력을 만들어낸다. 기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차별 사회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둘째, 사회는 성폭력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더디거나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 많은 경우 이전의 전통적 의미의 성폭력이 ‘직접 대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은 성폭력으로 인정되거나 법적 보호(처벌, 피해자 지원 등)에 포함되는데 법률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물론 그런 측면도 존재한다.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다는 측면에서 ‘그게 왜 문제인가’라고 여겨지거나,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가짜인데 왜 문제인가’라는 이야기는 전통적 의미의 성폭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디지털 성폭력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논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디지털 성폭력이 아니라도 성폭력이라는 것이 정의되고 명명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졌던 일이다. 성폭력은 폭력으로 명명되기 전부터 존재했으나, 오랜 기간 처음부터 농담이거나 과격한 성관계로 여겨졌다.

따라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정부와 사회적 분위기를 겪을 때, 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회적 이해의 부족으로 여겨지기보다는 역시나 성폭력이라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다는 역사적 경험이 다시 소환된다.

셋째, 결과적으로 여성과 피해자의 개념과 규정은 언제나 부정당했으며, 이것은 여성들과 시민들의 투쟁으로 쟁취되어 왔다는 것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알게 되면서 많은 여성들은 그것을 성폭력 또는 성범죄라고 여기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 반면 이를 인정받거나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

사실 우리는 기술의 발전이 성폭력으로 연결된다는 오랜 경험을 해왔다. 이러한 경험은 사전 예방 또는 사전 사각지대 해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법률에 용어나 항목이 없다는 이유는 폭력을 쉽게 부정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따라서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기 등장하기 전까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러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계속 반복됐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사회적 인식과 이에 따른 법률적 사각지대를 해소해 온 것은 ‘여성들의 투쟁’이었다. 성폭력의 초기 명명부터 직장 내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 여성폭력과 젠더폭력은 지속적으로 피해를 부정하는 사회에 맞선 투쟁으로 사회적 의제가 되고 해결의 방법을 만들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공통점은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복 경험됨과 동시에 과제

딤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역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딤페이크 성범죄, 무엇이 악화되었는가

그럼에도 이번에 문제가 된 딤페이크 성범죄는 이전의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과는 또 다른 양상과 특성을 가진다.

딤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딤페이크라는 기술의 발달이 범죄를 가속하거나 범죄의 심각성을 높였다는 것, 온라인에 게시된 일반적인 사진이 범죄에 사용됐다는 점, '지인 능욕'이라는 것이 가해의도가 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가해자의 다수가 십 대라는 측면 등이다.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기존 성폭력과는 몇 가지 차이를 가진다.

우선 그동안 벌어진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확산의 우려가 크다는 점이 있다.

디지털 공간 중 가장 일상적인 SNS라는 일상의 공간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폭력이 발생함으로써, 무작위적인 광범위한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미래 피해의 규모 측면에서 이전의 폭력보다 확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지인 능욕'이라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 모욕이라는 방식으로 성폭력이 확대 변형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한편 어느 때보다도 범죄 인식이 떨어진다는 점도 또 하나의 차이점이다. 여성과 시민들이 느끼는 피해의 강도와 불안감에 비해서 성폭력이라는 인식과 대응책 강화에 대한 공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3) 딤페이크 성범죄의 3가지 특징 - 놀이, 모욕, 그리고 돈벌이

이 중에서 딤페이크 성범죄를 해결해나가기 위해 그 특징을 정리하자면, 놀이, 모욕, 돈벌이라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딤페이크 성범죄는 '놀이'로 여겨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알려졌다.

'놀이'라는 측면은 가해자의 많은 수가 십 대며,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이 떨어진다는 점으로 연결된다.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을 때 예방은 어려워진다. 따라서 딤페이크 성범죄뿐만 아니라 성폭력 자체에 관한 규정에서 '폭력을 놀이로 인식하는 문화'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실제 현실에서 놀이 또는 장난과 폭력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관형적으로 사용하는 '장난일까 폭력일까'라는 명제는 현실 사건에서는 그 구분이 쉽지 않기도 하며, 의미 없기도 하다. 장난 또는 놀이라는 것은 행위자의 의도이지만, 폭력의 규정은 피해자를 중심으로 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장난과 놀이라고 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폭력으로 규정되는 것이 맞다.

아직도 성폭력 사건에서 많은 경우 가해자의 의도가 범죄 규정 또는 양형 규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많은 가해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폭력의 의도가 없다는 것은 피해를 없애주지 않는다. 행위의 정도가 매우 약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도

딤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가 중요한 사건은 거의 없다. 의도를 강조하는 현재의 성폭력 규정은 확인하기 어려운 가해자의 의도를 증명하게 만듦으로써 오히려 성폭력에 대한 논란을 키우게 된다.

따라서 폭력을 놀이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이것이 폭력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는 과제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법률상에 존재하는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랫동안 반성폭력 운동가들은 성폭력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규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 재판부에서도 이를 판결문에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재판부의 자의적 해석이 존재하기도 하고, 아직도 ‘음란’을 중심으로 하는 성폭력 및 성희롱 규정도 존재한다.

음란(淫亂)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음탕하고 난잡한 것을 말한다. 대법원의 판례로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이라고 정리되었다. 이러한 ‘음란’의 개념은 성폭력을 성적인 욕망의 문제로만 한정하게 된다. 구체적인 항목으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제14조의2 허위영상물반포 등의 조항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등이 있다. 이에 대해 <딤페이트 성범죄 OUT 공동행동>도 함께 참여한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등 155개의 여성인권단체 공동성명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을 성적인과 같은 중립적 표현으로 대체해야 한다’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되는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둘째, 성폭력의 이유가 ‘모욕’이라는 점은 가장 심각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처음 드러난 딤페이크 성범죄 텔레그램 소통방의 주된 내용은 ‘지인 능욕’이었다. 아는 여성을 모욕하기 위해 딤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성폭력에서 성별권력의 확인과 여성 혐오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적 원한이 없이도 여성 또는 아는 여성에게 모욕을 주려는 것과 여성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성적인 대상으로 만드는 것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 여성을 동등한 인간이라기보다는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성차별 사회에서 성별권력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에게 위협적인 사회문화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 사회, 성별권력이 폭력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과제를 주고 있다.

셋째, 딤페이크 성범죄의 특징은 ‘여성에 대한 모욕, 성폭력이 돈벌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라넷부터 N번방까지 디지털 성폭력에는 매개가 되는 사이트나 SNS 등의 온라인 플랫폼이 있었고 이를 통해 이윤을 얻는 사람 또는 집단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딤페이크 성범죄 역시 처음 드러난 텔레그램 소통방 역시 제작을 의뢰받는 곳이었다.

성범죄가 돈이 되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이익에 대해서 철저히 환수하는 것은 범죄의 확산과 조기차단을 위한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제대로 차단해오지 못했다. 불법촬영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문제에서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이었던 양진호의 경우는 범죄수익에 대해선 한 푼도 몰수·추징하되 않았다.

당시 양진호 관련 사업체에서 성착취물을 유통하고 얻은 수익이 500억 원대로 예상되었으며, 양진호가 관여한 성취물 등이 약 388만 건이며 35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최종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그쳤다.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은 디지털 성범죄가 여전히 돈벌이가 되는 해볼 만한 사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사회에 준다는 의미에서 매우 문제이다.

따라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부당이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와 배상을 자리 잡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3.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의 힘을 만드는 공동행동!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의 변화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것은 이미 그 답이 다 존재하기 때문이다. 소라넷부터 N번방을 겪으며 우리 사회의 무수한 전문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서지현 법’으로 명명되고 있는 2022년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은 디지털 성폭력 해결을 위한 법적인 대책을 제안서로 정리해서 제출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대책과 대안이 아니라 대책을 실행하게 만드는 사회적 힘이다. 그리고 이것이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을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미 성폭력 관련 사회적 인식과 법 개정, 디지털 성폭력의 대응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확인했다. 소라넷 폐쇄와 N번방 방지법도 여성들의 적극적 대응과 투쟁이 만들어낸 성과였다.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해결을 위해 여성과 피해자의 이야기를 사회가 들도록 만드는 것, 의원 몇 명이 제출한 개정안 몇 개가 아닌 총체적인 대책, 계속 발전하는 기술매개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의 확보 등을 누가 어떤 힘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가장 큰 과제가 우리앞에 놓여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크게 넘어야 할 산은 어쩌면 우리 안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무력감이다.

소라넷 폐쇄 운동으로부터 긴 시간 여성들은 디지털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왔다. 해화역 시위와 N번방 투쟁으로 이어진 긴 투쟁 동안 여성들은 성차별 사회와 그것이 만드는 여성폭력·젠더폭력을 드러내고 변화를 외쳐왔다. 그리고 일부 법과 제도의 진전을 만들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여성폭력을 경험하였으며 이번에 딥페이크 성범죄처럼 여성을 모욕하는 범죄의 진화를 목도하기도 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후보시절부터 반복해 온 ‘구조적 성차별 부정’과 ‘여가부폐지’ ‘여성폭력 관련 사업과 예산의 폐지’를 겪었으며, 안전과 평등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지는 ‘백래시’에 노출되기도 했다.

현재 딥페이크 성범죄를 겪으면 우리 사회 여성들이 느끼는 최고의 감각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과 ‘변하지 않는다는 무력감’일 수도 있다.

답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모여야 한다. 우리의 무력감을 깨는 유일한 방법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모여야 안전하게 피해를 드러내는 일도, 변화를 요구하는 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지금도 <공동행동>이 필요한 이유이다.

[발제] 딤편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 발족의 의미와 활동 보고

강나연 ·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운영위원

딤편이크 성범죄가 서울대와 인하대 등 대학의 이름이 붙은 사건들을 필두로 사회에 공론화되었고, 전국 70여 개의 학교 이름이 붙은 딤편이크 성착취방이 개설된 사실이 드러났다. 2023년 대한민국의 대학 취학률은 76.2%으로, 대한민국 사람들 중 과반수 이상이 생애주기에서 대학을 거쳐가게 된다. 딤편이크 성범죄 가해자의 대다수가 10대, 20대라는 점을 볼 때, 대학은 교육기관이자 (가정, 학교, 직장과 같은) 사회 구성 단위로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에 지난 9월 23일, 20여개의 대학 내 페미니즘 및 인권 소수자 동아리와 학생 자치기구가 모여 ‘딤편이크 성범죄 진단과 변화를 위한 대학생 집담회’를 열었다. ‘딤편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은 대학 당국과 교육부가 딤편이크 사태에 있어 분명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전무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하여 해결을 어렵게 하는 대학 사회 문화를 바꾸기 위해 시작했다. 오늘 발제에서는, 대학생 공동행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지금까지의 활동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본 발제 내용은 집담회의 발제와 토론했던 내용, 대학생 공동행동의 오픈마이크 요구안을 기반으로 작성하였다.

1. 딤편이크 성범죄, 대학은 무엇을 하고있는가

‘딤편이크 성범죄 사태’는 전국 70여개의 ‘○○대학교방’이 개설되었던 것처럼 대학 뿐만 아니라, 군대, 교사 사회, 가정을 막라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합성물 피해자 가운데 61%가 20대였고,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경찰에 신고된 피해자 중 약 3분의 1 또한 20대였다. 이처럼 여성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딤편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교육부와 대학 당국은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올해 딤편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의 84% 가량이 10대임³⁾이 밝혀지면서 많은 언론과 정부 부처는 현 딤편이크 성범죄 사태를 ‘청소년의 문제’만으로 국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1) 대책이 전무한 교육부와 대학 당국

교육부가 대학가에서 발생한 딤편이크 성범죄 관련해서 했던 언급이나 대책은 아직 발표된 바 없다. 정부는 이번 딤편이크 사건과 관련해 8월 30일에 여성가족부, 경찰청,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0월까지 딤편이크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의 경우, “10대 청소년과 중고등학교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학교 내 실태 조사와 예방 교육 강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 예시로 충북교육청은 충북도청, 경찰청과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

3) 딤편이크 성범죄 집중단속 뒤 신고 7배↑...피의자 84%가 10대, 한겨레, 김채운, 2024092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59824.html

딤편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고, 서울시 교육청은 23일 1361개 초중고 및 각종 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참여하는 딤편이크 대응 관리자 연수를 실시했다. 지난 21일 울산교육청은 교육감 직속으로 울산지역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참여하는 딤편이크 대응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또한, 교육부는 8월 28일에 '딤편이크 성범죄 대응 전담조직 TF'를 신설하여 교육청 관할 하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주 1회 학교 딤편이크 관련 사안 조사, 피해 사안 처리, 심리지원,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현재 대학은 작년부터 교육부와 경찰청에서 배포하는 '캠퍼스 안심 소식지'의 '딤편이크 성범죄 편' 포스터를 각 학교 인권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 외에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경희대 등 주요 서울권 대학의 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딤편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공지조차 찾아볼 수 없으며, 성균관대, 가톨릭대 등 일부 대학에는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두 장짜리 공문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예방 요령 안내"가 재게시되어 있을 뿐이었다. 이는 중고등학교에서 각종 대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모습과 대비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부는 각 대학을 지도·감독하는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막상 대학 내 딤편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공문을 배포하는 것 말고는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딤편이크 성범죄의 조사, 사안 처리, 지원, 예방교육까지 모든 절차에서 대학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2) 대학의 부실한 성평등 교육 체계 및 인권센터

지난 2019년 '텔레그램 성착취방(N번방) 사건' 이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대학 성범죄 예방 대책으로 '교육'을 제시했다. 이후 '고등교육 기관장은 해마다 1회, 1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다. 또한 2022년 7월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이후, 여성가족부는 "재학생 이수율 50% 미만인 학교에 대학평가지 감점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정부 지침에 따라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 대학생의 이수율을 살펴보면 그 실정은 초라하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8년 42.7%, 2020년 45.9%, 2022년 54.7%로 미미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겨우 과반을 넘긴 추세이고, 이것마저 대부분 온라인 교육 또는 일회성 교육으로 진행되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역부족이다.

N번방 사건 이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또한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올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권센터가 전담직원만으로 구성된 대학이 전국 333개 대학 중 단 12개, 3.8%에 불과하다. 검직을 포함하여 인권센터에 소속된 직원이 3명 이하인 학교는 214개교에 이른다. 상당수의 인권센터가 인력과 예산 부족,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지원체계 부족 등의 제반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딤편이크 성범죄에 대해 어떻게 각 대학 인권센터가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거나 선제적인 학생 보호 및 피해자 지원대책을 만들 수 있겠는가?

3) 대학 당국의 의지는 학내 평등 분위기에 결정적이다

지난 9월 23일에 진행된 대학생 집담회에서, 유의미하게 토론되었던 내용 중 하나는 대학 당국의 의지가 학내 평등 분위기에 결정적이라는 점이었다. 대학 사회 안에서의 백래시를 이야기 나누던 중, 한예종 돌곶이포럼은 "한예종은 (다른 대학과 다르게) 백래시가 담론장에 발붙이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이야기했다. 그 이유를 1학년 필수 교양 수업인 '예술가의 젠더 연습'으로 꼽았다. '예술가의 젠더 연습'은 2019년 '문화계 미투' 이후 편성된 필수 과목으로, "인간으로서, 예술가로서 페미니즘을 왜 공부해야하는지" 배우고, "인간 중심이 무엇인지" 사고하고 배우는 과목이다. 돌곶이포럼에서는 학기 초가 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수업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그들의 언어가 위협으로 느껴질 정도로 권력이나 힘이 실리지 않으며 성평등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가 더욱 지배적"이라고 이야기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강의의

딤편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교수들 또한 성평등한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는 것이 주는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대학생 집담회에서 다양한 학교의 사례를 들으며 느꼈던 것은, 해당 대학 본부의 성차별과 폭력을 배제하기 위한 해당 대학 본부의 조치와 제도가 학내 분위기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대학 본부에 따라서 성평등, 성인권 수업을 1학년 필수 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고, 교수에게 성평등 교육을 하고 차별과 혐오의 표현을 쓰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며, 대학 내 자치 기구와 단체의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현재 대학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학생 자치 활동 자체를 이어가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강의실 대관을 하기 위해서 지도 교수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만들어두었거나, 모 학교의 경우 시간당 최대 7만 원의 냉난방비를 받는다. 대자보는 행정실의 도장을 받고 붙여야 하거나, 화장실 등에 붙이는 홍보지를 대학 본부 차원에서 붙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대학 당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학생 운동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재 대학은 상당 부분 학생의 권리보다는 대학의 편의와 이해관계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다. 등록금 상승, 학생 식당의 품질 저하 또는 폐쇄, 질은 낮고 비싼 기숙사 등의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한 조치 역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대학 당국은 학생 운동의 힘이 미미한 상황에서, 대학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생활권, 성적 자기결정권 또한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학이 바뀌기 위해서는 대학 내 페미니스트 학생 운동의 힘이 커져야 하는 동시에,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가 필요하다. N번방 사건과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 이후 대학에 폭력예방교육과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었던 것처럼, 학교 당국과 교육부를 압박할 수 있도록 외부의 압력이 많이 필요하다.

2. 딤편이크 성범죄와 대학사회

지금까지 딤편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젠더폭력 사건에 대해 대학이 어떠한 조치나 대응책을 펼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지금부터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은 어떤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한다. 딤편이크 성범죄와 젠더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키는 결국 페미니즘이다. 이 페미니즘을 대학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지, 혹은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대학 사회 변화를 위한 길에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알려줄 것이다.

1) 온라인상 안티-페미니즘 백래시가 대학 사회에 준 영향

페미니즘에 대한 공격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페미니즘의 이론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과 페미니스트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대학 사회에서 딤편이크 성범죄와 젠더폭력을 말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한 건 이 안티페미니즘 백래시의 영향이 크다.

(1) 역차별 담론으로 딤편이크 성범죄 부정하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페미니즘의 성평등 담론과 이론에 대해서 역차별 담론, 공정담론으로 대응하며 페미니즘은 여성 인권이 아니라 과한 것을 요구하는 것, 여성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이 더 피해자라는 식의 주장이 퍼졌다. (이 과정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단연, 이준석의 공정 담론이었다) 생리공결제, 여학생 휴게실, 총여학생회 등 여성이 남성 중심의 대학 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역차별이라는 이유로 맹목적으로 비난하며 해당 제도를 없애기도 했다.

안티 페미니즘의 대표적인 주장인 ‘역차별 담론(여성인 아니라 남성이 피해자)’은 성폭력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만들거나, ‘일단 나는 가해자가 아니’니 가해자로

딤편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물지 말라고 하는 태도, 또는 ‘여성들도 가해자다’는 안티페미니즘의 주된 3가지 반응이다. 딤편이크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똑같은 반응이 나타났다. 이준석 국회의원은 딤편이크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을 때, “과잉규제가 우려”된다며 딤편이크 성범죄를 축소했다. 또한 인하대 딤편이크 사건이 MBC를 통해서 공론화되자, 인하대학교 총학생회는 발 빠르게 입장문을 내며 딤편이크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가해자가 인하대학교 학생이 아닌 것에 초점을 맞추며 MBC에 사과를 요구했다. 다른 한 축에서는 ‘여성시대 n번방’과 같은 말을 하며 본질을 흐리기도 한다. 어떠한 방식이든 딤편이크 성범죄 사건 자체에 집중하여 이 문제에 공감하기 보다는 부정하거나 자기 방어적인 태도로 나왔다. 결국 안티페미니즘 백래시로 다져온 성폭력과 성차별에 대한 부정이 딤편이크 성범죄 사건을 제대로 성찰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2) 페미니스트 낙인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 위축시키기

안티페미니즘 백래시는 딤편이크 성범죄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응할 힘도 축소시켰다. ‘페미=일베’라는 도식이 대중화되고, 페미니스트를 남성을 혐오하는 집단으로 악마화하는 것은 페미니스트 주체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이어졌다. 백래시가 심했을 때는, 내가 대학에서 겪는 성차별보다 안티 페미니스트들이 가하는 공격이 더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로 여겨질 정도로 백래시는 폭력적으로 이루어졌다. 페미니스트로 알려진 개인을 학교 커뮤니티에서 1년 간 실명을 언급하며 괴롭히기도 하고, 여성주의 교지에 압정을 박아두거나 동아리 구성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려고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스토킹,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조리돌림의 방식이었으며 이에 타격을 받고 활동을 쉬는 페미니스트들을 주변에서 보아야 했다. 이는 페미니스트로 정체화하는 여성의 수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페미니즘 동아리, 인권 동아리의 신입회원 가입 수 자체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성폭력이나 성차별적 문화에 대응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줄어들게 되었다. 대학에서 여성들과 페미니스트들의 입을 다물게 했던 백래시 뒤에서 딤편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성폭력, 성차별적 인식, 남성 권력은 계속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다.

2) 학습된 무력감과 대학 사회의 탈정치화

딤편이크 성범죄와 페미니즘 이슈에 대한 반응을 스펙트럼으로 본다면, 찬성이든 반대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별에 상관없이 그 중간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문제의식은 느끼지만 무력감을 느끼거나, 사람들 간에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또는 공격받을까봐 페미니즘 이슈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이다.

두려움, 걱정, 분노, 그리고 무기력도 경험한다. 나의 일상에서 나도 모르게 성폭력이 있었고 나도 경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현실로부터 눈을 돌리고 싶게 만들기도 한다. 디지털 성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사건을 뉴스에서 계속 접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에 국가와 소속 대학에서 제대로 해결할 거란 기대가 없는 것이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자존심과 존엄성을 짓밟고 있어도 예전부터 원래 그랬다며 견뎌야 하는 마음이다.

또는 딤편이크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을 때, 자신에게 집중될 페미니스트로 낙인 또한 두려움의 요소로 작동한다. 여대를 다니는 한 서페대연 회원은 교양 수업에서 팀플 주제를 ‘강남역 여성살해사건’으로 정했다가 “너무 정치적이니까 안전한 주제로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바꾼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여대임에도 자신이 한 이야기에 따라 공격을 받지 않도록 자신을 검열하며 폭력을 내면화하기도 하는 것이다. 무언가 행동을 하고 목소리를 내려면 완전히 뛰어들어야 한다는, 자신의 많은 것을 걸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동아리에 가입을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기도 한다.

또한 젠더폭력, 성차별과 같이 페미니즘에 직결된 이슈는 성별 상관없이 ‘젠더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의제

딤편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로 생각해 아예 회피하기도 한다. 여러 학교의 학소위에서 관련한 행사를 하거나 홍보 포스터를 온라인에 게시해도 그냥 지나치면서 갈등도 불지 않는다는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는 페미니즘 이슈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기보다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가 어떤 공격이나 비난을 받을지 몰라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관계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자신, 탈정치화된 자신을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닐까.

3. 딤편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 우리는 대학을 포기하지 않는다.

대학 당국과 교육부의 무책임함, 페미니즘에 대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대학 사회에서 <딤편이크 성범죄 OUT 대학생 공동행동>은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 딤편이크 성범죄 규탄을 주제로 오프라인에서 캠페인으로 만난 대학생들과 시민들의 반응은 온라인으로 접한 대학 사회의 분위기와 사뭇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지난 12일 고려대 학내인권단체협의회(이하 학인협)는 캠퍼스 내 광장에 나가 딤편이크 성범죄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며 이에 동의하는 연서명을 받았다. <딤편이크=성별갈등? 문제는 성착취 구조! - ‘고려대방’ 없는 안전한 학새사회로>라는 제목으로 선언문이 담긴 선전물을 나누어주며 오픈마이크 발언을 진행했다. 결과는 약 5시간 만에 300명에 달하는 인원이 연서명에 동참했고, 온라인 연서명으로도 이어져 27일 7시 기준 개인 603명의 동의를 받으며 마무리했다. 박가현 서울지역대학 인권연합동아리(이하 인동) 고려대 지부 지부장에 따르면 상품을 주는 헌혈행사에도 일주일 간 150명이 참여하고, 총학생회 간식행사도 280명을 대상으로 하고, 연고전의 농구는 230명, 빙구는 480명이 보러간다고 한다. 그런데 딤편이크 성범죄 규탄에 한 학교에서 600여명이 모였다는 것은 대항 여론 형성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대학생 공동행동은 10월 3일에는 신촌에서, 4일에는 홍대에서 각각 한 시간 가량 오픈 마이크를 진행했다. 신촌에서는 1시간도 안되는 시간 동안 100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이틀간 진행하여 총 280여 명의 개인 연서명을 받았다. 딤편이크 성범죄 사태가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른 뒤임에도 여전히 시민과 학생들의 관심이 식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캠페인에 연서명한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사인을 하기도 하고, 남성들 또한 연서명에 참여하는 사람 중 1/3을 차지했다.

이처럼 대학생 공동행동은 대학 사회의 여론이 젠더 갈등 및 여성 혐오로 대표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개인에게선 사안에 대한 공감과 분노를 발견하고 있다. 대학생 공동행동은 다음 주까지 경희대, 한예종, 이화여대에서 남은 오픈마이크를 진행하여 학생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교육부나 정부청사앞으로 가서 대학생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파편적으로 흩어진 공감과 분노를 모아 이러한 목소리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더 많은 학생들을 포괄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저항적인 행동을 만들었을 때” 젠더 갈등 담론이나 탈정치화를 제치고 대항 담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저항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페미니즘이 공격을 받는다는 이유로, 페미니즘 가치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페미니즘을 명확하게 지향하되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와 실천으로 대학 사회의 페미니즘 연대체, 나아가 시민사회의 연대체를 구성하는 것, 이 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것이 필요하다.

[토론] 그럼에도 우리는 성평등교육을 이야기합니다.

김근우 · 남다른성교육연구소 대표강사/활동가

지난 8월 '딤편이크' 기술을 이용해 또래 여성들의 몸을 불법합성하고 이를 유포하는 일을 한겨레 단독 보도로 알게 되었다. 디지털 성희롱 성폭력 예방 수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강사방에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교환하며 딤편이크 피해자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참여자에게 어떤 내용을 더 집중적으로 다뤄야하는지 등으로 말이다. 하지만 사건의 심각성과는 별개로 나는 이 문제 자체가 크게 새롭지 느껴지지 않았다. 딤편이크 같은 문제가 청소년 사이에서 어느날 갑자기 터진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놀이라는 탈을 쓴 여성혐오

2000년대 초반 정부의 적극적인 인터넷 보급에 힘입어 온라인 문화는 우리의 생활에 빠르게 스며들었다. 자연스럽게 놀이문화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놀이도 그 중 하나였고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 안에서는 유저들이 자기들끼리 맵을 만들면서 노는데 그 중에는 여성 연예인의 '옷 벗기기' 같은 게임도 있었다. 현재의 딤편이크는 10대만의 독특한 놀이 문화가 아니다. 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남성 집단 사이에서 과거부터 이어져왔던 여성의 성적대상화와 성폭력이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우리의 눈에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의 10대에 파고든 딤편이크 성범죄에 대해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에서는 현재 사태에 대해 "전국 초중고 대상 딤편이크 성범죄 전수조사 및 디지털 기록 삭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시행, 국가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문제에 책임을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여성가족부의 장관은 7개월째 공석이며, 국가는 안전 조치로 "아이들의 SNS 계정 사진을 지우라"고 하는데 이는 '성 충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노출 있는 옷을 입지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 문제에서 사회의 책임을 계속 회피한다면 또 다른 이름의 성 착취 사건은 언젠가 또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한국 사회 전반에 안티 페미니즘 물결이 여성 및 성소수자 혐오와 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학교도 예외일 수 없다.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차별과 관련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성평등에 대해서도 남성 청소년과 여성 청소년 간 인식과 태도는 격차가 있다. 하지만 성평등교육에 대한 예상은 대폭 삭감되거나 없어지고 있으며, 운 좋게 교육 현장에 나가더라도 성평등 관련 단어 사용에 제약을 받는다. 예를들어 일부 학부모의 민원으로 '젠더', '섹슈얼리티' 같은 필수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하고 대전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 성인지감수성까지 청소년에게 사용해서는 안 될 단어로 얘기한다. 강사의 입을 단속하는 교육 환경에서 강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고 참여자와 소통하는 교육에서 멀어진다. 청소년을 미성숙하고 위험한 존재로 여기며,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교육 현장의 전반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실제 삶과 동떨어진 교육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다가오고 실망

답페이지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감을 안겨준다. 특히, 남성청소년의 경우 성적 주체로서 청소년을 인정하지 않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달하는 '하지마', '보지마' 같은 통제 메시지인 안티 페미니즘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을 더 강화시키는 재료가 된다.

경성중학교의 새로운 시도

마포구에 위치한 경성중학교는 지난 8월 여름방학이 끝난 후 '융합' 성평등 수업이란 이름으로 페미니즘 기반의 교과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평등·페미니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남성 청소년이 교육을 듣고 인식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수업이다.

이를 위해 페미니즘 도서를 읽고 이후 남성청소년 대상 성평등 교육을 국어 교과 시간을 빌려 진행했다. 그리고 성평등 교육이 끝난 후 국어, 영어, 사회, 과학 교과목과 연계된 성평등 내용을 통해 인식 변화를 확인한다.

총 3시간으로 기획된 강의에서 첫번째는 남성 청소년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페미니즘에 대한 인상을 나누며, 분노하는 페미니스트가 떠오른다면 왜 분노를 하는지 시작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는다. 두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확인하며 이 고정관념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권력보행 같은 활동을 통해 상대의 위치에 서보는 연습을 해본다. 마지막으로 3차시에는 '연애'를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정상 연애'를 배우고 친밀한 관계에서 가부장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를 통해 단지 폭력을 저지른 남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을 구분하여 타자화하며 비난만 하는 게 아니라, "남자라면 야동 쬐는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는 말로 남성의 성욕을 과대표장하며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문화를 성찰한다. '김여사', '혜지', '김치녀' 같은 표현으로 여성을 조롱, 멸시하면서 남성연대를 강화하는 콘텐츠와 행동에 왜 정색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지 드러나지 않는 사회 성차별 구조를 가지고 전달한다.

아직 교과목 수업은 진행되지 않은 채 성평등 수업만 끝난 상태에서 담당 선생님과 교육을 진행한 강사들이 회의를 가졌다. 회의 결과 학생들이 페미니즘이라는 단어에 갖는 거부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일상의 균열이 일어났음을 담당 선생님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 예전에는 페미니즘 자체를 혐오하며 단어 자체를 꺼내지 않았던 청소년이 '나 페미예요'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만 봐도 되게 신기하며 변화를 느끼고 있음을 공유했다.

그리고 총 8개 교과에서 4개 교과 선생님 앞에서는 이제 적어도 혐오하는 표현을 하지 않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 교육을 진행한 강사들도 낙태죄에 질문하는 친구도 있고, 여성혐오에 대해서 보이루 같은 질문도 있었다. 저항을 표현하기 위한 질문이 아닌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을 통해 반감이 적지 않을테지만 관심을 가져주는게 흥미로웠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술 발달 앞에서 미래 세대 남성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

학교에서 성평등 수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다양한 저항과 마주한다. 어떤 참여자는 바로 고개를 숙이거나 강사가 하는 말에 틀린 점이 없는지 매의 눈으로 확인한다. 매번 강의현장은 어떤 돌발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긴장의 연속이며, 강의를 끝나면 매우 지친다.

하지만 이들의 저항감은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기도 하다. 성적 주체가 아닌 수동적인 교육의 대상자로서 머물기를 바라는 기성 세대의 권력이 작용한 결과물이다. 그래서 그냥 뻘한 성교육이 되지 않기 위해 더 자주, 더 열린 교육이 필요하다. 성지식과 성건강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닌 타인에게 어떻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타인의 성적권리를 침범하는 행위인지, 성범죄 목격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건전한 성문화 생태도를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더 늦기 전에 필요하다. 얼마 전 흥성의 한 중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를 다녀오며 참여자가 남겼던 말이 기억에 남는다. “그냥 뻔한 교육일 것 같았다 그런데 오늘 교육을 듣고 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교육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은 아니지만 교육만큼 효과적인 예방책이 있는지, 수요자에 맞춘 교육을 우리는 실행에 옮겼는지 성찰이 필요한 순간이다.

[토론] 딤페이크 성착취범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백운희 ·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한 달여 전 ‘딤페이크 성폭력 박멸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로서, 딤페이크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청소년의 양육자로서 위기감에 직면하면서 고민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몇몇 인터뷰와 언론 보도 모니터링 등 딤페이크 성착취 범죄와 관련해 단체에서는 물론 개인적인 관심을 놓지는 않았지만, 이번 토론문을 작성하며 과연 8월 말에 가졌던 분노와 개선 의지를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는가? 자문하게 됩니다.

첨부자료는 지난 8월 말 ‘정치하는엄마들’이 배포한 성명서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딤페이크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 ▲정부의 텔레그램 수사 협조 불응 시 앱 다운로드 중단 등 단호한 제재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부 및 수사당국의 대국민 브리핑 실시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 성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등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토론과 단체의 성명에서 제기했던 문제점과 제안을 중심으로 그간의 경과 사항을 살피고자 합니다.

1. 포괄적 성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이뤄지고 있을까?

- ‘수치’와 ‘숨기기’

딤페이크 성범죄가 미성년,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겁지인방 등 학교를 매개로 한 피해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론화되면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처벌강화, 텔레그램 성범죄물 신속 대응 등 사후 대책 중심이었다. 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딤페이크 성착취 범죄는 갑자기 생겨난 ‘신종 범죄’가 아니다.

상대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젠더기반폭력(범죄)의 속성에 기술 발달이 더해지면서 폭력의 양상이 좀 더 촘촘하고 넓게 일상으로 파고 든 것이다.

폭력을 ‘장난’, ‘놀이’, ‘일탈’로 가볍게 치부하고 면죄부를 부여하는 사회 통념, 상대의 정보를 쉽게 빼낼 수 있는 기술 발달, 성범죄로 기소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학습’의 결과물이다.

결국 젠더기반폭력에 관대한 사회 구조와 성착취 문화를 뿌리 뽑지 않으면 같은 문제는 다시 되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고리를 끊어내려면 기술을 비판적, 윤리적으로 활용하는 법과 여성을 존엄한 인권을 가진 동료시민으로 인식하고 안전한 관계맺음과 경계를 살피는 포괄적 성교육이 함께 필요하며 동의와 경계 개념이 구성원 모두에게 자리잡혀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관계당국이 초기에 대책이라고 내놓은 내용은 여성 ‘숨기기’였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서울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긴급 스쿨벨을 발령, 양육자 대상 학교소식 알림 어플을 통해 전송했다.

그 내용은 “온라인에 개인 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마세요”, “타인의 동의없이 사진, 영상을 찍거나 전송(게시)하지 마세요” 등을 담은 것이었다. 청소년인 자녀가 온라인 상에서 자력구제 대책이라며 공유되는

딤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내용을 알려준 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스스로를 숨기고 흔적을 지우기.

‘딤페이크’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112,117에 신고하거나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경찰청과 상의하라 내용도 포함됐다.

범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싶었겠지만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라는 퇴행적 표현을 사용하고, 대부분이 처벌 규정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실망스러운 대목이었다.

하지만 이조차도 일부 학교에서는 알림을 받지 못했다는 양육자들이 등장했고,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학년에 따라 알림 발송 여부가 달랐다는 제보들이 있었다.

여기에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학생들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학생들만 모여서 ‘조심하라’고 교육을 했다는(남학생들은 축구를 했다) 온라인 게시글은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한 초등학교 교사가 딤페이크 의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진위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관계자가 “딤페이크 학교라고 거론되는 것 자체가 모욕스럽다”고 밝힌 지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

성범죄 관련 피해가 발생하면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앞서기보다 일단 잡음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리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학내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를 탓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딤페이크 성착취 범죄와 교육 현장의 대응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쿨미투 전수조사 및 가해자 처벌 요구에 그토록 미온적으로 대처하던 각 교육청들의 모습에서 변화한 것이 없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성교육과 디지털 교육은 여전히 각각 형식적이고 기능적인 성격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생식기의 기능, 임신과 출산, 임신중단 등의 정보 제공 중심의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성교육이 아니라 성과 관련해 동의와 경계, 쾌락, 권리(재생산권 등)에 대해 폭넓게 배움으로써 결국은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익히는 포괄적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15년 교육부가 처음으로 배포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내용은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여성은 한 남성에게만 성적으로 반응하지만, 남성은 성적으로 매력적인 여성들과 널리 성교할 수 있다’는 수준이었다.

표준안이 성착취와 성범죄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교육부는 10년이 다 된 현재까지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⁵⁾

딤페이크 성범죄 공론화 이후 학교현장에서 진행되는 성교육에 변화가 있는지 알고 싶다는 언론 취재를 계기로 주변을 살펴봤다. 대부분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를 방문해 전교생 대상 시청각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교육의 내용 역시 딤페이크 성착취 범죄시 처벌을 강조하고 있었다.

아직 바뀐 것은 없어 보인다.

2. 수사 및 처벌 강화 대책의 변화는?

1) 딤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법제화, ‘알면서’에서 조항에서 드러난 정치인들의 인식 문제

4)

최근 고교 진학을 앞둔 양육자들의 대화에서 스쿨미투 고발과 딤페이크 성범죄 피해 리스트에 오른 학교를 대하는 인식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스쿨미투 가해 교사 처벌과 재발 방지에 미온적이었던 한 여자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보나 부정적 인식이 없는 반면 딤페이크 성착취 범죄와 관련해 학교명이 알려진 곳에는 지망이 꺼려진다는 것이었다.

5) 이에 따라 일부 양육자들은 그룹을 지어 성교육을 사교육 시장에 일임하기도 하고, 일선 학교들은 교육청별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 질적 내용에서 차이를 보여왔다.

심지어 교육부는 지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섹슈얼리티, 재생산권 용어 자체를 삭제했다.

아울러 교육청별로 일부 혐오 단체들의 항의를 이유로 성교육, 성평등 도서를 유해도서로 지정해 열람을 제한하거나 폐기하는 사례들이 잇따랐다.

아동청소년과 양육자들은 그럼 어디서, 어떻게 성교육을 배우고 가르쳐야 할까? 비판이 일 수 밖에 없는 이유였다.

딤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국회는 지난달 26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⁶⁾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딤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보도를 보면 법사위에서 딤페이크 성 착취물 처벌 조항에 ‘알면서’ 단어를 포함할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알면서’ 단어를 포함해 무고한 피해자 양산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상을 봤을 때)딤페이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며 “고의라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넣어야 불필요한 수사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피해자들을 너무 양산하는 것보다 정말 목적을 갖고 악의적 고의자들을 처벌하고 가장 먼저 강력히 처벌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법이 통과된 것은 다행이지만, “모든 행정법규 위반은 모두가 고의”라는 국민의 힘 의원들의 발언처럼 법체계적 특성을 모르기 힘든 국회의원들이 굳이 이 법에서만 고의성을 다룰 여지를 집어넣어 어떻게든 가해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려고 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장면이었다.

2)텔레그램 밖- 지속되는 성착취 커뮤니티와 여성혐오의 저연령화

7)

높은 보안성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텔레그램이 마약 유통·거래와 딤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통 같은 각종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지난달 30일 마침내 텔레그램측이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으로 딤페이크 성착취물 영상물뿐만 아니라 마약과 도박 등 모든 불법정보를 삭제 차단 조치하기로 한다는 것.

하지만 텔레그램에서만 범죄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국내외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딤페이크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사이트들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유형이 다를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조건만남, 즉 성매매가 랜덤채팅 메신저에서 공공연히 이뤄져 왔다. 메신저 운영 업체에 대한 수사, 당국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여태껏 아동 성착취 범죄 등이 이뤄져 온 국내 플랫폼에 대해서는 손을 놓는 행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3. 파편화된 양육자들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가?

학내 성폭력 등 아동·청소년의 성범죄와 관련해 호명되는 양육자 상이한 대개 “피해자의 피해에는 관심 없고, 내 자녀의 대입(성적)이 중요하다”는 모습으로 그려진다.

과연 그러할까?

아동·청소년들의 성폭력 사안, 특히 학내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양육자들이 개입(교육주체로서 역할)할 수 있는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현재 학교에서는 수업에 방해되는 문제행동을 보일 경우 학생을 분리하거나 물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고시가 적용 중이고, 양육자(학부모, 보호자)의 경우 10월 1일부터 사전에 예약을 거쳐야만 학교를 방문할

6) ‘딤페이크’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징역형 가능... 강화된 성폭력처벌법 본회의 통과 (경향신문)

https://m.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09261838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7) 프레시안, ‘텔레그램방 130배... 딤페이크 처벌법 비슷한 제N의 소라넷’ (2024년 10월 3일자 보도)

딥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다. 외부인의 출입으로부터 학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인데 이는 곧 학부모가 외부인이라는 의미다. 학교와 학부모의 소통이 줄수록 공론장은 줄고 서로는 파편화될 수 밖에 없다.

딥페이크 성착취 범죄를 다루는 언론의 시각처럼 사회적으로 호명되는 양육자, ‘엄마’는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주체라기보다 불안함을 호소하는 소극적 대상에 머무른다. 8)

양육자들을 연대의 자리로 호출해야 한다.

4.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학내 성폭력 피해 학생을 지원한 교사의 투쟁과 시민사회의 연대

남학생 숫자가 여학생 수의 2배에 달하는 학교가 있다.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을 향해 “가슴이 크다, 작다”는 식의 성희롱을 했고, 몸을 만지는 성추행이 오랫동안 지속됐다. 이를 전해 들은 한 교사는 무기명 설문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제보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학교는 해결책으로 남학생들에게 여학생들과 말을 섞지 말라고 했다. 학교측의 과실로 사안을 진술한 피해 학생들의 명단이 노출됐다. 가해자들은 피해 학생들을 색출하고, 찾아가 위협했다. 사이버불링도 일어났다. 2차 피해가 심각해지자 교사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에 이를 제보했고 센터에서는 2차 피해를 사실로 판단하며 6가지를 권고했다. 가해자 사과, 피해자 회복프로그램 및 성교육, 재발방지책 마련 등이었다.

학교는 이를 이행하는 대신 이를 공론화 한 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보 결정했다. 당사자 동의없는 부당전보였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올 초부터 1인 시위로 저항해 온 지혜복 교사의 이야기다.

학교와 서울중부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은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교사를 해임 징계한 것도 모자라 직무유기로 형사 고발했다.

“용기를 내 성폭력을 고발했던 학생들이 무기력과 패배감에 빠지지 않게,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투쟁의 이유를 밝혔던 교사에게 교육당국은 이렇게 응징했다.

시간을 끌수록, 피해자들은 고립되고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할 것이다. 비판 여론은 이내 열어질 것이다. 학내 성폭력 해결에 미온적인 이들의 태도에는 이 같은 수순을 염두에 둔 모습이 역력하다. 가해자들은 성범죄에 관대한 사회, ‘쉽사리 처벌받지 않음’을 학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복 교사의 투쟁에 주목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부터 성범죄에 익숙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 편이 되어주는 존재를 지켜내기 위해,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인간상을 보여준 어른을 지켜내기 위해 함께 연대하기를 제안한다.

8) 딥페이크에 속타는 엄마들 “디지털 시대 달라진 성평등 교육 절실”

[별첨]

이것은 국가 재난이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더불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으로 불안과 혼란을 종식하라!**

- ▷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설치하라
- ▷ 정부는 텔레그램 수사 협조 불응 시 앱 다운로드 중단 등 단호히 제재하라
- ▷ 국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 및 수사당국의 대국민 브리핑 실시하라

지옥이 따로 없다. 타인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디지털 성범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하는 텔레그램 채널 및 채팅방이 이미 만연하고 있다. 참가자가 1,300여 명에 이르는 한 대학생 딥페이크 채널에는 70여 개 대학별 대화방이 개설돼 있었으며, 참가자 2,300여 명에 이르는 중·고등학교 겹치인 채널도 드러났다. 딥페이크 봇이 탑재된 텔레그램 방 참가자가 22만 명에 달한다는 기사에 이어, 서울경찰청이 딥페이크 봇 8개를 확인해 내사 착수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엑스 상에는 전국 500여 개 학교가 포함된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목록이 유포되고 있어, 이로 인한 학생·학부모들은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 알 수 없는 극도의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다. 사회 전체의 신뢰가 붕괴하고 있는 국가적 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협이 과대평가 되고 있다.”(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급발진 젠더팔이, 그만할 때도 됐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 일부 정치인들의 막말에 분노가 치솟는다. 피해를 막기 위해 SNS 상의 기록과 기억을 삭제하고, 가해자를 특정하려고 자력구제하는 청(소)년들의 참담한 현실 속에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했나?

2019년 N번방, 박사방 등 텔레그램을 통해 여성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범죄 가담자가 26만 명에 달한다는 발표에 받았던 충격이 생생하다. 텔레그램이 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수사당국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날로 확대되어 갔다. 국회가 다수의 ‘N번방 방지법’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텔레그램 등 외국 기업에 대한 수사 협조를 강제할 방안이 없어 근본적인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현실이다. 2020년 법원은 아동 성 착취물 25만 개를 공유한 세계 최대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수익을 취한 손정우를 송환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를 불허하여 피해자들과 여성들, 양육자들의 가슴은 피멍으로 물들었고, 2021년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팀장 서지현 검사)를 꾸려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더니 결국 일 년도 안 돼 해산시켰다. 텔레그램 등 외국 기업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시 국내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해야 한다는 전문위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가 디지털 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도외시하는 동안 AI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누구나 손쉽게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유포할 수 있게 됐다. ‘시큐리티 히어로’에 따르면 2022년 3천여 건이던 딥페이크 포르노물이 2023년 21만 건으로 4.6배 이상 증가했다.

(출처: <https://www.securityhero.io/state-of-deepfakes/#overview-of-current-state>)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무너지고 접근 연령도 점차 낮아지면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 여성·여학생에게만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거나, SNS 계정의 사진을 삭제하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여성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삭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개인에게 불안과 공포와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 텔레그램, 엑스 등 외국계 빅테크 기업의 수사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들 플랫폼이 범죄의 온상이 되는 이유는 가해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 협조에 불응 시 해당 앱의 국내 서비스를 제재하는 등 단호한 대응이 필수다. ‘시큐리티 히어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 포르노 피해자의 99%가 여성이고, 한국인 피해자가 전체 53%에 달한다. 이준석 의원이 지난 28일 국회 과학기술

딤페이크 성범죄 OUT 공동행동 중간결산 : 돌아보고 나아가기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별 텔레그램 이용자 비율을 운운하며, 딤페이크 봇 참가자 22만 명 중 한국인은 700여 명일 거라고 발언한 것은 한국의 현실을 왜곡하고 은폐한다. 한국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역할이다. 가해자가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는 사태의 본질이 아니다. 이준석 의원 본인이야말로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한국 여성과 한국 남성 간의 젠더갈등을 조장하고,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 저열함을 탈피하기 바란다.

국가수사본부가 7개월의 집중단속을 표명했지만 이것으로 부족하다. 경찰청 내 딤페이크 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정례적인 브리핑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엑스 상에 유포되고 있는 477개 학교 명단의 진위 여부와 수사 진척 상황 등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국민이 엑스 등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현재는 교육청 별로 공지하는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신고된 건수가 실제 피해 건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 상 '피해 학교 목록'이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민적 불안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27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 간담회에서 딤페이크 성범죄에 대하여 마약 범죄 수준의 단속을 언급한 만큼, 검찰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 준하는 특수본 구성이 시급하다. 관련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개최가 시급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수사당국과 공조 없이 일방적으로 텔레그램 등에 삭제·폐쇄 요청하지 않도록 수사당국 중심의 대응체계를 재정비 해야 한다. 텔레그램 방 한 곳에서 수많은 가해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와 수사가 충돌하지 않도록 여가부와 방심위가 수사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야 한다.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포괄적 성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라. 아동·청소년 당사자는 물론 양육자, 보호자, 교직원 모두 아동·청소년들의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개인의 건강권, 교육권 및 차별금지과 같은 보편적 인권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성 인권 교육 예산을 삭감하고 전국 학교와 지역 도서관의 성평등 도서를 폐기했다.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아동·청소년들이 가담하거나 피해를 입게 된 현 사태를 야기했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이다.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왜곡된 성 관념을 바로잡을 예산을 해마다 늘려도 모자랄 판에 교육부가 AI 디지털 교과서 전환에 1조 2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투입을 투입한다는 소식에 개탄스러울 뿐이다. 학교 안팎으로 후퇴해만 가는 성차별 구조 속에 아동·청소년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넘어 가해자가 되지 않는 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는가?

'내 곁의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만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폐허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서로를 믿고 기대며 편안하게 잠을 자고 공부하고 일을 하고 놀러 가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하는엄마들은 정부와 국회의 실효성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감시할 것이다.

2024년 8월 29일
정치하는엄마들